

국회 법사위 ‘검찰 개혁 공청회’ 여야 난타전

與“檢, 수사·기소권으로 패악”…국힘 “위헌 심판 청구 대상”
민주·혁신당, 나경원 “조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 사과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침예하게 대답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거론하면서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 출신 민주당 박군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흥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 진출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운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

수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군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회의 진행과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님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님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 1번 반장을 뽑는데, 예 2번 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진출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나 의원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따가 신상발언 시간에 하라.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선 의원들을 겨냥해 “조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비위 2차 가해 의혹’ 최강욱 진상 조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시…혁신당 성추행 사건 관련 강연 발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이 진상을 조사한 뒤 징계를 요청하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만약 당사자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 윤리감찰단은 신속히 진상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자신이 열린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당 진로를 둘러싼 격론이 있었던 상

황을 회고한 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지금 성 비위가 어떻든 (사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다.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안 다음 판단하고 싸우는 것이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면 좋겠다”며 “좋아하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비유했다.

최 원장의 이런 발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고 특히 이날 혁신당 감미경 전 대변인의 탈당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강 전 대변인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탈당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광주시당, 서구갑 핵심당원 의견 청취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4일 서구갑 당협에서 주요 당직자와 핵심 당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당직자 및 핵심 당원 소개, 시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인사, 핵심 당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안태욱 국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당원과 소통과 단합을 위해 각 당협별 현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시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특별재판부 선임 문제를 거론하며 “헌법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에 맞지 않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은 기업 투자 위축과 일자리·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여당과 정치 특검이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중앙당에 이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지 벌어지는 것은 제야당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언급하며 “당 대표와 지도부, 원내·원의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모여 내란 프레임과 야당 탄압에 맞섰다”며 “모두 뚝뚝 뚫쳐 이재명 정권의 독재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텐안먼서 연대 과시한 북·중·러

中 열병식 일정 마무리…3국 정상회의 별도 개최 안한 듯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모인 북중러 정상 이 텐안먼 망루(성루)에 함께 올라 ‘3국 연대’를 과시했지만 3자 차원의 정상회의는 별도로 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귀국이 보도된 이날 오전 현재까지 북중러 3국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북중러가 텐안먼 망루에 나란히 등장하는 ‘상징

적 차원’의 연대 과시를 넘어 사상 최초로 3국 정상회의를 열지는 이번 중국 열병식의 주요 관전 요소였다.

3국이 공식적으로 마주앉아 정상회의를 한다는 것은 나름의 의제를 가지고 3자 협력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對) 중국 견제망을 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을 위시한 소다자 협의체를 추진하는 것에 비견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중러 협력 제도화는 지역 안보구도에 구조적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연합뉴스

진보당, 광주시 ‘쿠광 표창장’ 비판

광주시가 쿠광에 표창장을 수여하자 진보당 광주시당이 “산업재해 다발 기업”이라고 비판하며 시정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재 논란 기업에 표창을 수여한 결정은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주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자존심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전날 쿠광이 호남권 최대 규모로 알려진 광주첨단물류센터와 신선식품 전용 광주 신선센터를 건립한 점을 제시하며 표창했다.

진보당은 “일자리 숫자만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없다”며 과도한 노동 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잇따른 산업재해를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